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꾸러졌다..."다단계 고용구조 속 이주노동자 목숨 방치돼"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6.26 16:04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 열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공장 '아리셀'에서 중대재해 참사로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고 다친 가운데,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등이 (가)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발생 이후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기업이 저지른 중대범죄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이 명확해 지고 있으며, 더 밝혀져야 할 진실과 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영정 앞에 고개 숙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부상당한 노동자의 쾌유와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분의 빠른 회복을 전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현장과 사회를 열고 함께 조직적 대응을 위해 꾸러졌다.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의 요구를 제시하고,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자체의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대책위의 요구다.

발언자 중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한국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은 3D에 죽음이 더해진 4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고발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 한 해 백 명 넘는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한국사회, 정부가 답을 해야한다. 이주노동자 목숨도 소중하다.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전근대적 참사 맞으며 괴로워해야 하나. 무사히 퇴근하는게 그리 큰 꿈인가.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분노했다. 더해 "아리셀의 인력공급업체라는 메이셀은 아리셀 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어 사내 불법 위장도급업체로 보인다. 이런 위장도급업체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유해물질을 다루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에 집중되고 있다. 정주노동자의 3배 이상이다"라고 했다.

중대재해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제대로 기소, 수사조차 되지 않는 현 실태 또한 반복되는 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이 수석은 "자본의 요청만 받아안으며 각종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윤 정권을 규탄한다. 아리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앞뒤없는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경기도분부는 이번 참사를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규정했다. 참사 이후 하나둘씩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니 어쩌면 참사가 예견된 것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그만큼 다수의 범위반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 뒤 "그러나 이런 위법 사항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화마에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비는 일"이라고 전했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 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의 화재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 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연이틀 언론에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렵고, 특히나 아리셀 참사에서는 방재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미 배터리 산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큰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 특성과 위험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소방·방재 대책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현재의 방호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참고할 만한 방재기준이 없다'는 소방방재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번 참사를 통해 현실화 됐을 뿐이라고 대책위는 전하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러한 고위험업무에 이들이 투입했고, 희생되도록 방치했는가"라고 분노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단순히 화재폭발 취약성의 문제(직접원인)로만 국한되지 않고,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다단계로 이어진 고용관계 등을 포함한 근본원인, 조직문화 등'을 찾아 규명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 신재 피해자 신속구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6일 오전 10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주)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